

한반도평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4대 공동선언 비준을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측은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언급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의 상징들이 폐기될 전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

먼저 극소수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들의 전달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특히 휴전선 일대 주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또한 남북협력의 소중한 자산인 개성공단이 폐쇄 상태에서 더 나아가 영구히 사라질 위기를 불러왔다.

우리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하며, 남북정상 간 4대 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2017년의 한반도는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다. 2018년 4.27판문점공동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를 짓눌렀던 전쟁의 악몽이 사라졌다고 우리는 믿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남북 양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이 사단이 발생하였다. 이번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4.27과 9.19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4.27과 9.19공동선언은 휴전선 일대의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일탈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9.19공동선언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국회에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가 전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국회는 즉각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 상황을 야기한 것은 6.15공동선언부터 9.19평양공동 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양 정상에 합의한 사항과 그간 여러 분야의 각종 남북합의서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나설 시간이다. 국회가 4대공동선언에 대해 즉시 비준 절차를 밟아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반도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을 망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2. 국회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3.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4대공동선언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즉시 이행하라!
4. 국회는 남북정상 간 4대 공동선언을 비준하라!

2020년 6월 15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사)금강산기업협회, 내륙투자·교역기업 일동